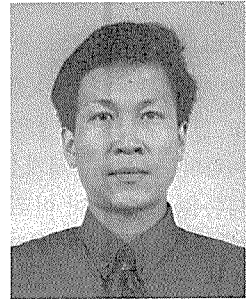


# AT&T 교환기 입찰참여허용으로 본 한·미 통신협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임 호 기  
본회 산업전자과 대리

## 1. 한·미 통신협상의 개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정부의 통신장비 조달규정을 무시한 채 미국 전신전화사(AT&T)의 신형 교환기 입찰을 허용하기로 해 국내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3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끝난 한·미 통신실무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전신전화사가 신형 교환기의 한국내 품질인증 절차를 연말까지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구매입찰 자격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서 신형 교환기 국내 판매가 허용 됨에 따라 이동통신용 교환기를 포함해 '98년까지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시장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잠식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신형 교환기는 가격은 기존 제품의 절반이면서 성능은 월등한 데다 이동통신용으로 강점을 갖고 있어, 국산 제품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산교환기

(TDX) 성능개선과 디지털 이동통신용 교환기 국산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당장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향후의 근거리통신용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협상도 우리 업계로서는 큰 걱정거리이다.

두 나라간 형식승인 면제 협정이 맺어질 경우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거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협상 대상 품목중에는 대부분 아직 국산화가 안된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면제 대상으로 관철시킬 협상력이 없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산업계의 우려인 것이다.

따라서 업계로서는 경제 전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관심과 대응책이

없는 한 국가 신경망을 송두리째 미국에 넘겨주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AT&T의 신형교환기 입찰참여 요구에서 허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이에 대한 영향 및 업계의 입장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하자.

## 2. 한·미 통신협상의 문제점

이번 통신협상에 대해 우리 산업계의 입장은 "국가간의 문제를 다뤄야하는 양국 협상에서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이 협상 대상으로 올려진 것이나 미국 정부의 압력에 두손을 든 우리 정부의 자세에 대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미 AT&T사의 신형 교환기의 품질인증절차의 일부를 생략해 주기로 양보함에 따라 그동안 자체 개발한 국산 교환기 TDX기종으로 상당수준 통신주권을 수호해왔던 국내 교환기 사업은 사상 최대의 위

기에 물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양보해서는 안될 사안을 양보함으로써 통신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향후 다른 분야에서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보여서는 안될 약점을 노출한 채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결정적인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높은 것이다.

또한 우리 업계는 당장 눈앞의 '시장잠식'이라는 현실적인 손실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안이하고 일관성 없는 협상태도가 더욱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여러 채널을 통해 AT&T기종에 대한 인증 압력을 가해 오기 시작할 때만 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 '92년 체결된 한·미 쌍무협상으로 많은 분야를 개방했으나 아직까지 국내법 및 절차상 외국기업의 시장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남아 있어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번 요구는 시장개방을 통한 자율적 경쟁도입이라는 종전의 논리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시장개방이란 양자합의 도출 사안과는 거리가 먼 일개 미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상식 이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미국 통신기업인 AT&T사가 최근 개발한 신형교환기(NO. 5ESS-2000)를 한국통신에 팔 수 있도록 제품판

매 이전에 의무적으로 치러야 할 국내 인증절차를 생략해 달라는 내용이다.

통신망 환경이 국민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통신장비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절차를 생략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양품이나 식품을 일정한 검사 절차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일인 것이다.

또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국내 입찰 및 인증제도에 문제가 많아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간 인증과정 및 절차를 없애 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통신에 물품을 납품할 때 엄연히 입찰과 인증절차를 밟는데 미국 측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이를 생략 또는 특혜를 달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정보통신부는 교환기의 인증제도와 인증절차는 수요처인 한국통신의 관할사항이니 AT&T사가 한국통신과 원만히 협의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식으로 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국 통신협상에서 미국 측의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인증 절차의 일부를 생략해 주기로 한 이번 합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우선 인증절차를 두고 국산 교환기와 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DX-10 개량형 기종의 인증절차를 받고 있는 LG정보통신, 삼성전자, 대우통신, 한화정보통신 등이 "AT&T에 대한 특혜"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는 바로 인증절차 자체를 생략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유는 5-ESS2000 기종이 이전 모델인 5-ESS의 개량형 모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다.

모델명만 유사할 뿐 전혀 새로운 기종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비록 개량형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1년 정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관례다.

국가의 기간시설인 통신망 장비를 구매하는 데는 어느 국가건 인증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 3. 미국의 대한 통신시장 전략

미국은 국내업계 및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기술의 자립화가 진척을 보이자 국내통신시

장의 진출이 협소해질 가능성과 함께 향후 국제통신시장에서 경쟁 세력으로 커가는 한국의 위상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 통신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 보존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통신주력화 의도는 서로 대립됐고 충돌은 이미 예견되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장차의 통신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번의 요구가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T&T는 올해초 자사 아태지역 지사장인 Sousa로 하여금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통신시장 진출의 문제점을 불만사항으로 보고했고 미 무역대표부는 수퍼 301조 발동을 운운하며 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문제는 국내 절차를 따르다 해도 내년이면 국내판매가 가능한 기종을 가지고 굳이 1년을 단축시키려고 수퍼 301조까지 들고 나오며 온갖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데 있다.

이에 대해 국내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강압적인 조치가 크게 두 가지 의도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미국은 국내 통신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통신장비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선을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AT&T사는 현재 한국이동통신의 아날로그 이동전화시스템 및

한국통신의 일반전화교환기 시장에 진출, 국내 통신장비시장에서 점하는 지위가 남다른 상태이다.

그러나 국내 LG, 삼성, 대우, 한화 등을 중심으로한 국산 전전자 교환기(TDX)의 개발과 CDMA 디지털 이동전화시스템의 국산개발로 AT&T의 장비판매에 향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AT&T는 국내 주력판매 기종이던 구형모델 5ESS를 단종시킨 상태여서 국내 통신시장 판매를 위해 한국통신의 형식승인을 마친 교환기 제품이 현재로서는 없는 점도 신기종의 연내 구매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오는 '96년과 '97년 기본 통신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EU, 일본 등의 경쟁사보다 유리한 여건을 미리 조성해 놓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이와 함께 업계는 AT&T사의 교환기 연내개방을 미국 측이 강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국내 통신시장을 종속시키려는 장기적인 포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AT&T가 구매를 요구하고 있는 신기종 5ESS-2000은 유선뿐만 아니라 이동전화와 ISDN을 포괄하는 지능망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와 개발기간을 거쳐 기술자립화를 구현한 국산 전화 및 이동전화 시스템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첨단기종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 신기종을 이용, 국산개발 장비로 대체되고 있는 국내 통신시장을 견제하고 나아가 유·무선 및 차세대 통신시장의 교환기 시장 전체의 장악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또 지난해 중국과 한국정부간에 합의한 통신분야의 국가적 협력과 관련 한국의 통신시장을 뿌리부터 흔들어 중국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자는 우회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업계는 개방압력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고 결론짓고 지난 3월 14일 관련 건의문을 재정경제원과 외무부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한국통신 등에 제출하는 한편 성명서 등을 통한 강력한 대응을 개시한 것이다.

또한 3월 23일 미 무역대표부와 한국통신간에 체결된 5ESS-2000에 대한 입찰허용을 무효화 하기 위해 국내 공정거래위와 감사원에 AT&T사를 정적 고소할 태세이다.

특히 업계는 정보통신기술의 자립과 발전 없이는 2000년대에 선진국반열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미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려하는 것은 한국을 영원한 개발도상국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까지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업계의 강력한 주장과 대응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 4. 한·미 통신협상에 따른 대응 방안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자교환기 등 주요 통신망 기기의 구매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즉 가격과 성능, 그리고 지속적인 성능개선, 유지보수에 이르는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물량에 차등을 두는 “종합평가제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유지보수나 성능개선 노력 등에 앞설 수밖에 없는 국내 교환기 업체들에게 합법적으로 “가점”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단순 가격 경쟁입찰의 형태인 현행 한국통신의 교환기 입찰제도는 궁극적으로 “좋은제품을 싸게 구입한다”는 입찰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또한 구매기관인 한국통신은 고 품질의 저가 제품을 구입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특정업체의 독점을 방지하는 한편 국산 교환기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격과 성능, 유지 보수 능력, 성능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교환기 구매제도의 도입이 결국 미국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교환기 등 통신시장을 개방했으면서도 “종합평가 구매제도”를 통해 미국과의 통상압력 해소와 자국 교환기 산업의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성공한 일본의 사례는 적극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입장에서 WTO체제 하에서 더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뒤 정부가 국내시장과 업계를 보호하는 관행은 더이상 어려워지며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대우통신, 한화정보통신 등 국내 교환기 4사는 이번 한·미간 통시기기시장 개방협상을 계기로 자구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관련, 일부 업체들은 현재 교환기 4사가 공동참여하고 있는 개량형 전자교환기 TDX-10A개발사업에서는 공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장기적인 대응전략으로 독자적인 투자와 기술축적으로 개량형 기종의 성능개선 및 신기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업계는 한편으로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AT&T 신기종의 국내 진출을 끝까지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이제 국내 4사가 물량 나눠먹기식으로 안주

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어차피 개방될 시장이라면 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으며 이번 한·미협상의 결과를 계기로 정부의 통신기기산업 지원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되다시피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 측에 강력한 요구를 맞받아칠만한 여건조성도 되고 있지 못한것이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하다.

세계화 및 개방시대를 맞아 국제간 무역분쟁이 날로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즉 기술개발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이 힘든 상황이다.

국제간 협상에 대한 전문인력과 지원기관의 마련과 함께 무엇보다 정부의 자주성있는 통상외교의 전개가 시급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차후의 통신협상에서 철저한 상황파악과 함께 확고한 원칙과 주관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개방화 시대에도 강대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시대에 대비하여 통신시스템의 예측화는 곧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